

제8회 ‘AEI 월드포럼’ 연설문 “동북아와 한미관계”

※1989년 6월 미국 덴버에서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제8회 ‘AEI 월드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에는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수상 등 세계적 지도자들과 각국 정부 고위관료, 기업 지도자, 저명한 석학(碩學)들이 참석했다. 金鍾泌 총재는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동북아와 한미관계’에 관해 연설했다.

존경하는 제럴드 포드 전 미국 대통령 각하,
존경하는 세계적 지도자,
각국의 정부 고위관료와 기업 지도자,
그리고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석학 여러분,

중대한 국제문제에 관한 세계의 지도적 토론장인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orld Forum에서 본인이 대한민국의 신민주공화당 총재로 연설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느 다른 주제에 대해서보다 한미관계의 현황과 그 미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이미 뿌리 깊이 내린 전통적인 우호보다도 최근 몇 해 사이 요란스럽게 표면화된 갈등이 더 크게 주목되는 두 나라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한국민에게는 물론 미국민들에게도 유익하고 시의적절(時宜適切)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미관계의 발전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나라의 관계가 이미 1세기의 연륜을 쌓아 왔다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하겠습니다. ‘은둔(隱遁)의 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국제정치의 격랑 속에 휘말리면서 태평양 너머의 신흥강대국인 미국과 정식 수교(修交)한 1882년으로부터 어언 107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한반도에 인접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는 경우, 미국이 한국의 첫 번째 수교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두 나라가 얼마나 오랜 벗이였는가를 웅변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우여곡절(迂餘曲折) 속에서도 한미 두 나라는 두터운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차대전의 종결을 전후한 시점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련도가 높아지면서 두 나라 관계는 특수한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민족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한 미국의 기여,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미국민의 희생, 그리고 베트남에서 형성됐던 자유십자군에 한국과 미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웠던 일 등은 두 나라 관계가 문자 그대로 혈맹(血盟)의 관계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이가 큰 두 나라를 특수한 우호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본인은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통된 신념이라는 이념적 요인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간의 창의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어떠한 힘도 하나님 주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信仰)은 두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울타리 속에 결속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 이념적 공통성에 균열이 발생했을 때 한미관계에는 심각한 갈등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보다 솔직히 말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궤도에서 벗어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이념적, 제도적 양립성(兩立性)이 약화된 경우,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자라났으며, 그것은 한미관계를 긴장시키곤 했던 것입니다. 그 긴장은 두 차원에서 나타났습니다.

미 행정부가 대한(對韓) 비판여론을 수용해 한국 정부에게 일종의 압력을 가할 때, 한미관계는 공식적 차원에서 이른바 불편한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대한(對韓)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공식관계가 큰 어려움을 겪음이 없이 우호를 유지할 때, 한국민의 차원에서 반미감정(反美感情)이 자라난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짝뜨고 1980년대에 들어와 확산된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의 공공연한 반미감정의 표출은 그러한 시각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미국의 대한 비판자들의 입장이 언제나 옳았다고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본인에게 우리 국내문제에 대한 외국인의 간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참견조차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못마땅한 것과 인정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이 바로 정치와 정책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뜻에서, 본인은 오늘날 한미관계의 발전적 전개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있는 반미주의(反美主義)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直面)하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한국 내에서 점증하는 반미감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한미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화를 성심성의껏 추진해나가 1990년대 전반에는 서구 선진국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야말로 한미관계 발전의 촉진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나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전망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해, 본인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한국민 대다수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산업화를 경험한 다른 사회들이 그러했듯이 이념적 다극화(多極化)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학생과 청년층에서 그 현상은 두드러져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공산주의를 수용하거나 사회주의를 지향한 세력도 있습니다. 급진적 혁명주의는 하나의 열병(熱病)처럼 대학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전문구와 플랜카드만을 주목한다면, 한국은 이미 급진적이며 폭력적인 좌익 혁명(左翼革命)의 불길 속에 잠겨 있는 듯합니다. 반면에 권위주의적 방식과 체제만이 이들 위협스런 모험주의적 혁명가들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하는 세력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언동(言動)에만 집착한다면 한국은 가까운 장래에 극우적(極右的) 정치변동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다수의 국민들 이른바 침묵하는 다수는 한국의 안전과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이념적 합의는 자유민주주의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에 결함이 없지 않고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역시 이 이념적 노선 위에서만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켜지고 국민 각자의 창의성이 자발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꾀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시민층, 그리고 이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정치 지도층이 요지부동(搖之不動)의 자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사회가 굳건히 형성되었습니다. 이 성숙한 시민사회는 위로부터이든 아래로부터이든 어떤 방향으로부터의 헌정중단적(憲政中斷的) 정치변동을 힘 있게 막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미관계를 특수한 우호관계로 발전시켜온 두 번째 원동력으로 본인은 전략적 이해관계(利害關係)의 일치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4강의 이해(利害)가 동시에 얽혀있는 곳입니다. 해양세력을 대표하는 미국이 또 하나의 해양세력인 일본과 제휴하여 공산 양대국(兩大國)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 바로 한반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전략적 요인은 이념적 요인과 표리관계(表裏關係)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하여 특히 소련의 팽창주의(膨脹主義)를 억제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소련의 관계개선과 화해 시도에 따른 탈냉전(脫冷戰)의 여파가 한반도에도 밀려와 한.소(韓蘇) 접근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러한 전략적 고려에 있어서는 아무런 근본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동맹함으로써 또한 일본의 안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흔히 일본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체제의 초석(礎石)이라고 부르는데, 한미군사동맹은 바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사활적(死活的)으로 중요한 일본의 안전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또 미일 안보체제와 더불어 미국의 태평양 안보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미군사동맹이야말로 국제적으로 서방세계의 자유와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안의 남북 군사대결 상황에 눈을 돌릴 때, 한미군사동맹체제의 긴요성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에 비해 우월한 군사력을 지닌 북한의 이른바 남한해방노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실용주의노선으로 수정하는 듯한 징후들을 보임이 사실이고, 우리로서는 그러한 징후들을 선입견 없이 전향적(前向的)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로 남아 혁명주의노선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看過)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관계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본인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장 이성적(理性的)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해 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한미관계의 전략적, 군사적 측면에 대한 본인의 이러한 견해가 오늘날 한국의 일부 학생층과 청년층에서는 보수주의적이며 친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외세의존적(外勢依存的)인 것으로 비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솔직히 시인하고자 합니다.

2차대전이 끝난 이후의 국제관계사(國際關係史)에 대해 반전통주의적 해석을 취하는 이른바 수정주의(修正主義) 학파의 이론에 영향 받은 그들은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그리고 한국을 미국에의 종속국가(從屬國家)로 파악하면서 미군의 철수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마저도 제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 밑에 때때로 순수한 민족주의적 감정이 흐르고 있으며, 또 1980년 광주(光州)의 비극 당시 미국이 취한 태도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민의 대다수는, 그리고 반정부적인 학생들 가운데서조차, 19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고비로 선진국가로 힘차게 발돋움 하고 있는 자신들의 조국을 미국의 종속국으로 비하(卑下)하는 견해에 부정적이며, 한미 안보관계는 돈독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미 안보관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에 초석(礎石)이라는 한국민 대다수의 인식은 노태우 대통령의 야심적인 북방정책(北方政策)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북방정책의 필요성에 찬성합니다. 소련과 동구(東歐)와 중국과 북한에 대해 우리는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벗어난 적극적인 접근정책을 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과 속도는 보다 더 신중하게 재검토됨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새 친구를 얻고자 오랜 벗의 신뢰를 흔들게 해서는 아무런 외교적 실익(實益)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툭 터놓고 말해, 한미 사이의 긴밀한 이해와 협조 위에서 북방외교가 전개될 때 그것은 한국외교 전반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의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본인은 이제까지 이념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관계의 현황과 미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두 차원에서는 비록 부분적으로는 갈등이 있겠으나 전통적인 유대(紐帶)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樂觀論)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장래가 모든 방면에서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부문은 낙관(樂觀)을 불허(不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 매년 1천5백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5천억 달러의 빚을 진 세

계 최대의 채무국(債務國)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은 특히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다방면으로 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흑자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요 교역규모가 열한 번째인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는 최근 몇 해 사이 원화 절상(切上)과 시장개방 요구라는 거센 외풍(外風)이 줄기차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 언론에서는 ‘한미 통상마찰’이라고 점잖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이 외풍은 행인의 옷을 벗기려는 이습우화의 강풍처럼 한국인들에게는 춥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 영향은 이미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도산(倒産)하고 있거나 도산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농민들이 큰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정부의 공업우선정책으로 국내에서 이미 불리한 처지에 있는 농민들은 미국의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한미 통상마찰의 가장 큰 피해계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마찰이 제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한국의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오늘날 권위주의체제가 민주화되는 역사의 큰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분규(勞使紛糾)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학원을 비롯한 사회 여러 부문들에서의 집단적 항의운동이 빈발(頻發)하고 있는 현실이 민주화과정의 필연적인 진통을 뼈아프게 증언합니다.

이 연설의 앞부분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이 진통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이 진통이 빌미가 되어 민주화를 후퇴시키게 될 정치변혁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감내(堪耐)해야 할 부담은 엄청나게 큼니다. 오늘날 한국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인당 4천 달러의 GNP, 1천억 달러의 무역시대를 이룩하여 경제규모의 면에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는 한국경제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외풍(經濟外風)이 주는 압력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될 위험성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지식인층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본인은 느낍니다. 여기서 주로 학생층과 청년층에서 자라난 반미감정은 한국사회를 떠받드는 주요한 기둥인 중산층의 공감을 받을 소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태가 그렇게까지 전개되는 경우,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기반은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본인이 미국 쪽의 어려운 상황을 경시(輕視)한 채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관계가 후견자(後見者) 관계(patron-client)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동반자관계로 발전한 오늘의 시점에서 그러한 접근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 두 나라는 어디까지나 진지한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복(報復)조치와 같은 감정적인 대처 또는 반미감정으로의 대응 같은 것은 서로 자제(自制)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바야흐로 국제정치와 국제경제에는 태평양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 작은 증거가 이른바 태평양제품(太平洋製品, Made in Pacific)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보급입니다. 그것은 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상징함과 더불어 태평양시대의 전개를 웅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국제관계의 시대 곧 태평양시대를 이끌어 나갈 잠재적인 국가들 가운데 선두주자(先頭走者)로 세계의 석학(碩學)들은 한국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몇 해 안에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선다면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그러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것인데, 여기에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와 돈독한 유대가 필수적입니다.

본인은 한미 두 나라 국민이 한미관계를 반드시 것처럼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본인은 두 나라 관계의 장래를 낙관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9. 6.22, 미국 덴버)